

월/요/광/장

박석두



1970년대 이후 농어촌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각종 정책사업이 시행되어왔다. 1970년대의 새마을사업과 부업단지 육성이 시작되었다. 이후 1980년대의 군 단위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및 도서·오지개발 사업과 농공단지 개발, 1990년대의 면 단위 정주권개발사업과 농어촌휴양단지·관광농원·특산단지 조성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년대엔 녹색농촌체험마을·전통테마마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마을단위 개발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농어촌지역 개발, 운영주체가 중요하다

소독개발사업은 사라지거나 마을단위사업에 통합되는 식으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1회성 설치사업에서 지속적 운영을 필요로 하는 운영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설치사업은 도로·농로·용수·전기·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이다. 아직도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이들 시설이 부족하며, 그러므로 설치사업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들 사업 중에서도 전기·상하수도 등은 지속적인 관리 운영해야 하고, 당연히 운영주체가 존재하고 있다. 근래에는 지방자치체가 활성화되면서 시·군이 상당한 규모의 박물관·전시관·공원·테마파크 등을 공공시설로 건설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다.

문제는 시설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지방정권에 압박이 크다는 점이다. 설치비는 국보 보조금으로 조달하지만, 관리운영비는 오롯이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입장료라든가 이용료 등은 무료

식되고 있다. 마을은 그러나 자연인도 법인도 아니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열성과 의욕을 가진 이장이나 마을 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사업이 유지되고 있으나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 개 마을의 규모가 평균 50호 내외인데, 마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이 은퇴 및 사망할 경우 마을단위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호수와 인구가 줄어, 사업 유지가 어렵게 될 가능성도 크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서 가장 확실한 운영사업은 수익사업·소득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내부에서 설립하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하지만, 수도권과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거리 농어촌의 경우 입지상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내부 설립 방안도 어렵지만 지자체의 주도하에 민간의 참여에 의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안, 이른바 지방공기업 혹은 제3섹터 기업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광역경제권 '밀어붙이기' 능사인가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재조정을 촉구하면서 선도산업 계획 제철을 거부해 온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을 배제한 채 경제권별 선도산업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광역경제권을 재편할 수 없다는 의미 표명이자, 호남권의 참여를 요구하는 '압박'이 아닐 수 없다.

광역경제권 변경 요구에 대한 거부 이유는 옹색하기 그지없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난 17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호남을 2개의 경제권으로 나누려면 충청권 등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광역경제권 계획이 제도적인 호남차별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뒤늦게 형평성 논리를 갖다 붙인 것이다. 형평성 유지가 변경 불가의 이유라면 왜 처음부터 지방 간 격차를 조정하는 정책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다.

이 장관은 언제 착수할지도 불투명한 남해안 선 벨트, 서해안 벨트 구상을 내

세워 호남권의 미래가 밝다고 했다. 수도권엔 규제완화라는 '현금'을 퍼주고, 호남에는 돈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어음'만 발행하겠다는 발상이다. 재조정이 없는 광역경제권 구상 강행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전남·북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지난 1970년 이후 38년간 빠져나간 인구비율이 전국 최고다. 지역 경제 성장률도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뜻사는 지역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경부축에 치중한 산업화 전략을 편 때문이다. 이런 데도 호남의 2배나 되는 선도산업을 영남에 배정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방제정을 격강시키는 강제 정책,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니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지방을 죽인다'는 비난을 듣는다. 지방민의 동의없는 정책 추진은 성공하기 힘들다. 광역경제권 재조정은 지극히 늦지 않았다.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신안 천일염 특구 지정 후의 과제

전국 천일염의 85%를 생산하는 신안군 염전이 '천일염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45년 동안 광물로 묶여있다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특화하려는 계획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특허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 규제가 풀리고 예산이 지원돼 주민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천일염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천일염 특구 지정은 시의적절하다. 지난 3월 염(鹽) 관리법 개정 이후 천일염이 건강에 특효가 있는 안전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일반 정제염보다 10배 이상 매출을 올리는 '특수'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신안군과 전남도 등도 천일염 명품화 3개년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기반 구축에 나설 참이었다.

특구로 지정됐음에도,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도전이다. 지식경제부가 이미

전국적으로 118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누구나 특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대나 의욕과는 달리 정부 지원이 별로인데다, 자본과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다.

그러나 천일염엔 희망이 있다. 전문가들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을 나설 경우 현재 1천억원대인 천일염 시장이 5년 뒤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중국산 천일염의 국산 둔갑을 막아야 한다. 당국의 단속에 앞서 업계 스스로 '짜퉁 천일염' 퇴출에 앞장서야 한다.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체계적인 출하 시스템과 브랜드를 만들고, 유행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인력 양성·가공·유통·체험관광 예산 지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신안 천일염이 프랑스 계랑드 소금을 누르고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강성기



15년 전 증부지방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었던 증거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감식 결과뿐이었다. 그러나 유전자 관리시스템(이하 유전자 정보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유전자 감식 결과만으로는 그것이 누구의 유전자인지를 알 수 없어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5년의 공소시효(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의 공소시효는 25년임)가 완성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전자 감식 결과의 높은 변별력과 신뢰성으로 인해 외국은 국가차원에서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는 법률이 있고, 영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유전자 정보를 통해 범인이 특정되기도 하지만,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정보는 이제 수사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범죄 용의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는 데 소

유전자 정보 은행

그런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3개월 전에 그 유전자가 누구의 것인지 밝혀졌고, 경찰 수사팀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공소시효 완성 전에 산에서 은둔 중인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다. 만약 유전자 정보은행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사건 발생 후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살인범을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뻔한 사건이었다. 현재 방영 중인 미국 드라마 'CSI 시리즈' 또는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서러마을 영아유기 살해사건' 등 엄격히 강력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유전자 감식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자주 보고 듣게 되었다. 오늘날 유전자 감식은 법 과학의 한 분야로서 살인 등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중복합점 붕괴함상,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미국 9·11 테러 사건 등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되는 비용과 시간이 실로 막대하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유전자정보은행의 효율성, 경제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유전자 감식의 정확성과 유전자 정보은행의 높은 효율성에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2006년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었으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역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08년 5월경 국회회가 만료로 폐기되어 법률화되지 못하고 말았다.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는 등 미래의 사법환경은 더욱더 공판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에 따라 객관적,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유전자정보은행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법률화, 제도화 노력을 바란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귀족 학원' 편법 과외 강력 단속해야

입시철만 되면 지방 서민들은 허탈감을 느낀다. 얼마 후면 대입 눈술시험이 있다. 서울의 노랑진과 강남에는 150~200만원의 눈술시험 대비 귀족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지방의 부유층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호텔에서 묵으며 눈술시험을 호텔로 불렀기도 한다고 한다. 서울대만, 연고대만 등으로 나눠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 능력껏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왜 시비하냐고 한다면 할말이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학원수강료는 상한선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수강료를 주거나 받으면 엄연히 불법이다. 또한 강의

시간 역시 밤 10시가 넘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를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학원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레지던스(주거 또는 거주)형태도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돈 있는 부유층이나 이를 노리는 학원들은 은밀히 이러한 불법 고액 강의를 한다. 불법 고액 강의 문제를 지적하면 '짜깁기' 등 부가요금을 내세우며 이를 빠져나간다. 부유층들의 이런 편법 과외를 그냥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만 하는 서민들은 허탈하다. 이런 잘못된 사교육 관행을 방지한다면 교육·가난의 대물림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 당국의 강력한 불법 사교육 단속을 촉구한다. ▲김진순·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기고

김형주



김치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이미지를 함축하는 대표적 상징물의 하나로써, 우리의 식탁에서 한 끼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음식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김치가 곧 한민족이요, 한민족이 곧 김치다'라고 할 만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김치는 오랜 전통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언제나 우리 민족의 회포예락을 같이 해왔다. 김치는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분화되었는데, 대체로 남부지방의 김치는 간이 세고 매운 반면 북부지방은 간이 약하고 덜 매운 맛을 띤다.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김자로는 단연

도로 육식할 것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논의의 초점은 내국인 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미주 등 세계인의 관점에 맞춰져야 한다. 둘째, 맛의 차별화를 위한 표준화 과정이 요청된다. 김치를 '아주 매운 것', '중간 매운 것', '덜 매운 것' 하는 식으로 세분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맛의 차별화는 김치제조자의 과학화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 우리나라 김치제조에 있어 재료투입량의 수치적 계량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실정으로, 첨가양념의 종류와 분량에 따른 시범제조를 통해 맛의 단계별 정형화를 이루어야 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김치의 세계화 전략

전라도김치다. 광주김치는 전라도김치의 한 가운데 있다. 전통적인 전라도김치는 고춧가루 대신 통고추를 갈아낸 다대기에 참쌀풀과 멸치젓, 청각, 마늘, 무채, 당근, 생강, 대파, 미나리, 골 등의 갖은 재료를 혼합한 걸쭉한 양념을 듬뿍 넣어 담가 영양이 가득한 예술의 경지에 근접한 식품이다. 전라도김치는 사람이 느끼는 다섯 가지 맛에 감칠맛이라는 한 가지 맛이 더해져 있다고들 한다. 이 절묘한 감칠맛은 약간 짜고 매우면서도 혀를 휘감치는 듯한 묘한 여운을 주며 자꾸만 구미가 당겨지는 맛이 되고나야 해야 할 듯 싶다. 여기에서 광주김치가 세계 속의 김치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과 실천방안이 요청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째, 강력한 제품브랜드의 창출작업이 필요하다. 현재의 브랜드인 '김치대왕'이 과연 경쟁력이 충분한 브랜드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본격적인 브랜

셋째, 제품의 디자인 및 포장재의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단번에 눈길을 끄는 상품디자인은 소비자들의 구매요인의 핵심적 요인이다. 이와 동시에 김치 고유의 특성이자 보관유통 과정상의 큰 문제점인 시어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김치가 덜 시어지는 포장재를 개발하고 보관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균일화를 위한 매뉴얼제작이 필요하다. 넷째, 생산과정에서 완벽한 위생관리를 기해야 한다. 광주는 남도음식문화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년 김치축제를 열고 있으며, 전라도김치의 본산지로 김치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주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치산업의 육성으로 광주와 전남이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지역민들이 함께 지혜와 노력을 모아나갈 시점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사>

면허시험 때 긴급차량 양보 운전 요령 추가

앞으로 운전면허 실기 시험에 긴급차량 출동시 양보하는 운전요령을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 갑작스런 사고로 도움을 요청하는 위급한 현장은 사고당사자 뿐만 아니라 구조하려는 구조대원들이나 불을 끄는 화재 진압대원들 모두에게 절실하다. 그 절실함에는 몇 분 사이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역대의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 현장 만큼이나 대원들을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긴급차량을 타고 가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면허를 취득할 당

시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며 시험에 대비한다. 그러나, 이런 의무는 시험을 치르고 면허증을 받고 난 뒤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실천하지 않는다. 대중 모르는채 긴급차량을 배려하지 않고 양보를 무시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운전면허 시험의 필기 뿐 아니라 실기 분야에 긴급차량 양보 항목을 추가했다면 한다. 그래야만 운전자들이 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양보 방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상황에 맞닥뜨리면 긴급차량을 양보할 것이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신수동

無 等 鼓

이사(李斯)는 진시황을 도와 진나라의 중국 통일을 이끈 일등공신이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가혹한 형으로 백성을 억압했다. 시서(詩書)를 불태우고 유생을 생매장한 진시황의 악행, '부서경유'도 그의 작품이었다.

역사는 그를 혹독한 법률로 정치를 주도하려 한 '법가(法家)'의 대표적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또한 자

있다. 서양의 법역에는 '선한 법률가는 악한 이웃이다'라는 말이 있다. 모두가 법은 '최선책'이 아닌 '필요악'이라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5공정권이 득세하던 1985년, 미국 문화인이 대학생에 의해 점거당하는 등 시국이 심상치 않았다. 당시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것이 '학

범의 남용



하고 과거 삼청교육대 식으로 운동권 학생들을 일시에 격리하자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반발은 거셴고 법안 제정은 무산됐다. 학원안정법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대표적 악법 시도로 기록되고 있다. 소위 '이념법안'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한창이다. 대표적 인 것이 시위 때 복면작업을 금지하는 집시법개정안, 사이버모욕죄 관련 형법개정안 등이다. 야당은 '비민주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의 남용이 권력의 허물로 돌아가는 선례가 생각나는 법전을 '악마의 바이블'로 비유한 바

당시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것이 '학

하고 과거 삼청교육대 식으로 운동권 학생들을 일시에 격리하자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반발은 거셴고 법안 제정은 무산됐다. 학원안정법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대표적 악법 시도로 기록되고 있다. 소위 '이념법안'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한창이다. 대표적 인 것이 시위 때 복면작업을 금지하는 집시법개정안, 사이버모욕죄 관련 형법개정안 등이다. 야당은 '비민주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의 남용이 권력의 허물로 돌아가는 선례가 생각나는 법전을 '악마의 바이블'로 비유한 바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information.